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조사 미적미적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 당 지도부의 엄중 조사와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고발 조치나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서 '뒷북, 셀프 조사' 논란과 함께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피해 당원들이 "복은 병폐" "또 다른 적폐"라고 제대로 된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일각에선 "고도의 정부적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4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일성으로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해 당 조직국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 선거 경선 조기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스럽다. 정경당당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7개 시·도당에는 공문을 보내 공경 경선을 거듭 주문했다.

광주시당 출마예정자인 유력 정치인이 본인 명의로 대량 문자를 발송하면서 당원 수만명의 실명을 일일이 적시해 과열선거를 부채질하고, 경쟁 후보들과 피해 당원들의 집단 반발을 촉발시킨 데 대한 중앙당 차원의 진상 조사와 시·도 조직단속에 나선 셈이다.

중앙당 사무부총장과 조직국장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당일 광주로 급파됐고, 시장 출마예정자 A씨 측이 관리당원을 포함한 10만여 당원에게 대량 문자를 보낸 경위와 관리당원 명단 확보 경위, 발송 과정,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지 조사는 반나절 만에 마무리됐고, 정황적 문제점을 상당부분 확보했음에도 한 달이 다 되도록 공식 입장이 없다.

광주시당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시당은 문제의 단체문자가 지난해 12월28일 이어 1월2일 또 다시 발송됐고, 당원관리 책임자인 핵심 당사자인 A씨 측은 조사하지 않아 '변죽 때리기' 논란만 키웠다.

당원 개개인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입당 일시 등 민감한 정

“엄정 대응” 지도부 주문에도 수사의뢰 지연 문제 PC 봉인하고도 의혹 보도 후 셀프조사 핵심 당사자 조사는 빠져 ‘변죽 때리기’ 논란

보가 죄다 포함된 당원 명부가 언제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조사해 "합리적 의심이 갈 만한 정황과 진실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지역 한 지역위원장은 "핵심 조사 대상이 누락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고, 지난달 31일 광주시당위원장 주재로 열린 8개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도 "그같은 불만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자 시당은 뒤늦게 A씨 측에 문자메시지 발송자료를 요청했다."

시당 고위 당직자의 연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마당에 시당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을 두고도 '셀프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여경사

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내에 구성된 진상조사단에 대해 "셀프 조사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시당 측은 "진직 당직자여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고 입장이다.

문제의 문자메시지가 A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발송됐지만, 실제 발신자는 A씨가 아닌 A씨 실질 비서격인 국가직 5급 사무관으로 드러났고, 피해 당원들의 생생한 진술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당 차원에서는 어떠한 공식 유감 표명이나 사과 발언도 없는 상황이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설 연휴가 있어서 자칫하면 시간끌기로 비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앙당 고위 관계자는 지난 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엄정 대응하라는 추 대표의 지시가 여러 번 있었다. 원칙적인 처리 방침에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 현재로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비 확인, 대의원대회 등을 위해 각 지역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당원 명부를 교부할 수 밖에 없는데, 각 지역위에서 그걸 모두 취합하면 (전체 명부가) 모아질 순 있지만, '광주는 계획적으로 유출됐다' 이런 문제인데,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공정성 시비도 그 때문에 나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A씨가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고 청와대 관련 인사여서 자칫 당청 갈등으로 비취지는 것을 우려해 당이 대응 수위를 낮추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정부적 해석도 나오고 있다.

나주 양계농장서 화재...13만마리 폐사

나주의 한 양계농장에서 불이나 닭 13만 마리가 폐사했다. 3일 오후 3시30분께 나주시 금천면 월신리 한 닭 사육농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차량 등을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여 1시간30여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화재로 인해 닭 사육시설 14개동이 전소됐으며 13만 마리가 폐사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모녀 상대 강도’ DNA 대조 끝 10년만에 검거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DNA 대조에 의해 10년만에 붙잡혔다.

광주 등부경찰서는 3일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최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25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원룸에 들어가 A(당시 47)씨와 딸 B(11)양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혈흔과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수사를 벌였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또 혈흔을 국과수로 보내 DNA 데이터를 확보했지만 용의자 검거는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해 11월 최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이 사건으로 최씨는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고 경찰은 DNA를 채취해 분석을 의뢰했다.

사건 당시 확보됐던 최씨의 혈흔과 채취된 DNA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찰은 통신 수사 등을 벌여 지난 1일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들에게 최씨의 사진 등을 보여주고 인상착의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10년전 사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가 특정한 주거없이 떠돌이 생활한 점 등을 토대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서 피항하던 낚시어선 침몰...1명 사망

여수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침몰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구조됐다. 3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1분께 여수시 돌산읍 작금항 인근 해상에서 A(70)씨와 B(70)씨가 승선해 있는 0.56t급 낚시어선이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사고 해상을 지나던 또다른 낚시어선(1.98t급)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인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숨졌다.

낚시어선은 이날 오전 8시에 출항해 낚시를 하던 중이었으며 강한 바람과 기상불량으로 인근의 작금항으로 피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취상태서 바다 빠진 러시아 근로자 구조

술에 취해 바다에 빠진 외국인 근로자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3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35분께 완도군 완도를 해변공원로 앞 해안가에서 러시아 국적의 A(35)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만취 상태에서 해변공원 해안가를 걷다 발을 헛디뎠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입춘 맞이, 소원지 쓰기 24절기 가운데 첫 절기로 새해의 봄이 시작되는 입춘인 4일 오전 서울 남산한옥마을에서 어린이들이 소원을 적은 소원지를 새끼줄에 걸고 있다.

“동구의회, 해병대전우회 ‘특혜 조례’ 폐기하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4일 "동구의회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특혜 조례'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해병대전우회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동구의회가 '특혜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정 출신인들이 모인 친목단체에 대한 자발적 활동의 보답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특정단체에만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겠다고 나서면 모 양세는 자발적 공익활동을 마치 대가를 바라고 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오고, 오히려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결국 선거를 앞둔 선심성 의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 조례의 특혜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동구의회 '해병대전우회 지원 조례'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멜로루 신터 장성군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경치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

장성에서 쉬하세요. 숲과 호수의 경치를 느끼며 즐길 수 있는 장성호 수변길